‘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 제주 소외 우려

국가우주위원회, 최근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의결
남해안 벨트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 추진
제주, 우주산업 육성 의지에도 정부 전략서 역할 없어

우주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이 도외 지역을 중심으로 설계돼 제주 우주산업 육성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9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국가우주위원회는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우주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정책·사업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이번에 의결된 육성 전략은 우주항공 산업을 기업과 지역이 선도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남해안 벨트를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2035년까지 우리나라를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의 3%를 점유하는 우주항공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2030년 민관협업 달 착륙선 발사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재사용발사체 개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허브’ 조성 등 핵심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 사천에 민관합작연구소, 우주탐사 인프라 등을 갖춘 산업-연구-행정 종합거점인 ‘우주항공허브’를 조성하고, 발사(고흥)·위성(사천·진주)·항공 제조(사천·창원) 거점을 연결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전략이 확정된 만큼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우주항공 산업이 남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는 2022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면서 우주산업 육성 비전을 발표한 이래 컨텍, 한화시스템, 우주 스타트업 기업들과 협력하며 성과를 만들어왔다.

이달 초 민선 9기 도정 임기를 시작한 위성곤 제주도지사 역시 도정의 핵심 미래 먹거리로 전임 도정의 ‘우주산업’을 꼽고 제주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전략에서 제주의 역할은 제시되지 않으면서 제주의 우주산업 육성 정책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도, 곶자왈 보호지역 사유지 추가 매입

20ha 대상… 오는 31일까지 매각 신청 접수

제주도가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를 추가 매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 보호지역 사유지 매입계획을 9일 공고하고 오는 31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매입 규모는 약 20ha다.

단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지적공부와 실제 위치가 다른 토지,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 전원의 매수 동의를 받지 못한 토지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 매긴 가격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토지 소유자는 매입가를 정할 때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제주도는 매각 신청서가 제출되면 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 여부와 매수 순위를 정한다.

매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토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소유자와 협의해 매입한다.

도는 곶자왈 보전을 위해 그동안 산림청,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과 함께 곶자왈 내 사유지를 매입해 지금까지 693ha를 확보했다.

임홍철 도 기후환경국장은 “곶자왈은 제주만의 소중한 환경자산”이라며 “사유지 매입으로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대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 수색영장 집행도 적법”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공판의 생중계도 사상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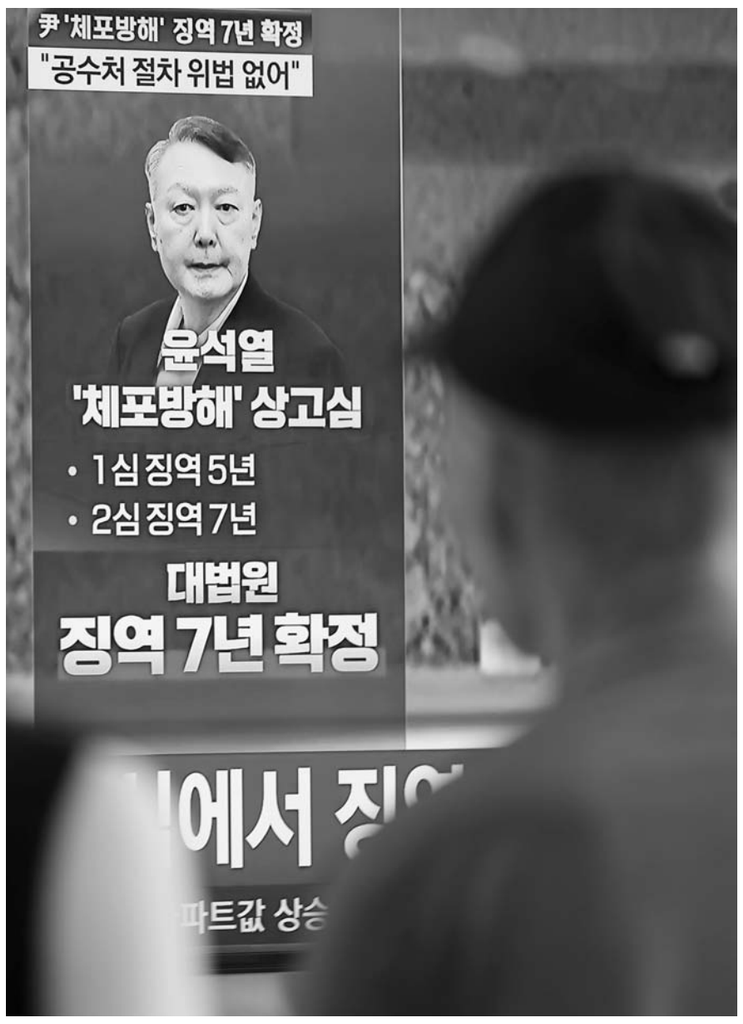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작성·배포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밖에 특검이 무죄 부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문제삼은 쟁점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작년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 이달 하순부터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으로 생계 위협에 노출된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7월 말부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으로 건설 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지수형 보험’으로 복잡한 피해 증빙 없이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발령’과 작업 중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 행정시 등 공공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 건설 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일용직 노동자다. 오후 1시 이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돼 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 실제 작업 중지 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까지 소득 상실분 일부를 보장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도내 하천 물놀이터 8곳 여름철 매주 수질 검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관광객이 여름철 하천 물놀이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수역 수질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이용객이 많은 월대천, 중문천, 솜반천, 속골, 강정천, 악근천, 돈내코, 정모시쉼터 등 8개 지역으로 서귀포시 동홍동 산지물은 유량 부족으로 물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는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1회 이상(총 4회 이상)으로 9월에는 월 1회 이상 실시해 연간 11회 이상 진행한다.

물놀이 수질 측정 항목인 대장균이 100㎖당 500개체 이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며 이를 초과할 시 이용객과 지역주민에게 물놀이 자제를 안내하고 원인을 확인해 재조사한다.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된 것이 확인되면 안내를 해제한다.

최근 3년간 진행한 수질조사 215건 가운데 권고기준을 넘은 사례는 31건이었으며, 모두 재조사에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여름철 물놀이터 수질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422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재활용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재활용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 관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안),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업인정 등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재활용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원
다. 면 적: 227,061㎡
라. 사업기간: 2022년 ~ 2028년
마. 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바. 주요유치업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C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C25),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31), 기타 제품 제조업(C3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E38), 연구개발업(M70)

2. 열람 기간 및 장소, 내용

구 분		내 용
열람기간		2026년 7월 10일 ~ 2026년 8월 6일(20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제주시 도시과, 구좌읍사무소, 동복리사무소
	정보통신망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열람내용		산업단지계획(안) : 지정·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동시진행
		교통영향평가(안)
		재해영향평가(안)
		사업인정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주민설명회	2026년 7월 20일(월) 19:00	동복리 게이트볼장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공람장소 및 정보통신망에 비치(게시)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기재 서면 제출
다. 제출의견: 산업단지계획(안) 및 교통영향평가(안), 재해영향평가(안),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064-710-6082)로 문의바랍니다.

법화사의 위상, 보존과 활용 학술세미나

일시 | **2026년 7월 16일(목) 13:00~ 18:00**
장소 | **법화사 구화루**(서귀포시 하원동 1071-1)

• 주관: 대한불교 조계종 법화사
• 주최: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 후원: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제주학연구센터

세미나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00~13:30	등 록		사회: **오화선**(제주역사문화진흥원 특별연구원)
13:30~14:00	개 회 사	**도성**(법화사 주지스님)	
	삼 귀 의	법화사 합창단	
	반야심경	법화사 합창단	
	내빈소개	사회자	
	축 사	- **김성범**(국회의원, 서귀포시) - **임정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진건군**(주제주중국총영사) - **김형은**(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 - **김완병**(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사홍서원	법화사 합창단	
14:00~14:40	좌장 : **강경희**(제주역사문화진흥원 원장)		
	▲ **제1주제: 법화사의 발굴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 **김경주**(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토론: **김종찬**(제주대학교박물관 팀장)		
14:40~15:20	▲ **제2주제: 법화사 연구성과 검토와 위상 재조명** 발표: **홍기표**(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이사) 토론: **한금순**(제주불교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		
15:20~16:00	▲ **제3주제: 법화사의 보존과 활용방안** 발표: **이화종**(한양대학교박물관 연구교수) 토론: **김태일**(제주대학교 교수)		
16:00~16:20	휴 식		
16:20~17:40	▲ **종합토론** - **고재원**(제주문화유산연구원 센터장) - **배상현**(창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박찬식**(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제주역사문화진흥원
문의 : T. 064) 726-6425

족보편찬 안내문

존경하는 제주부씨 종친 여러분,

우리 제주부씨 대종회는 소중한 우리의 혈통과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족보수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족보는 신세대 후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한문 혼용으로 편찬되며, 기 구축된 인터넷족보도 함께 업데이트되어 컴퓨터와 휴대폰으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족보는 한 문중의 혈통과 선조님의 훌륭한 업적이 수록된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종친 여러분들께서는 족보등재신청서 견본 등을 잘 참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족보등재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계파종회·지회 또는 족보편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보편찬 참여 안내

1 등재 대상자 제주부씨 후손
2 수단 등재 접수 기간 2026년 10월 31일까지 마감됩니다.
3 접수방법 ① 각 계파 및 지회 접수 ② 우편접수 : 제주시 중앙로186-1 삼성회관 3층 부씨대종회
③ 팩스접수 : 064-751-0912 ④ 이메일접수 : se9124@naver.com
⑤ 문자 및 카카오톡(사무국장 010-9840-7671) ⑥ 방문접수(제주부씨대종회)
4 신청서 서식 제주부씨대종회 홈페이지 참조
5 족보 편찬위원 위 원 장 : **부광훈**(대종회장)
자문위원 : **부만근** 고문, **부봉하** 고문, **부규진** 고문, **부평국** 고문
위 원 : 각공계종친회장 **부봉오**, 열공계종친회장 **부윤택**, 총무 **부재호**
협공계종친회장 **부창순**, 총무 **부준배**, 벽공계종친회장 **부송도**, 총무 **부상돈**,
홍공계종친회장 **부상복**, 총무 **부경조**, 재경종친회장 **부구욱**, 총무부회장 **부중환**,
재부산종친회장 **부형석**, 총무 **부두봉**, 재광주·전남종친회장 **부규홍**, 총무 **부진우**,
부영인 부회장(서귀포시), **부석규** 총무이사, **부군천** 사업이사, **부태준** 홍보이사
간 사 : **부관봉** 재무이사
6 문의처 제주부씨대종회 : ☎ 064-751-0911 **※ 신공계 후손은 대종회로 연락 바랍니다.**
※ 협찬 계좌번호 : 농협 961-01-078900(제주부씨 대종회)

제주부씨 대종회 회장 **부 광 훈**